

●● 농축산소식

속 터지는 축산농, 배 터지는 유통업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올들어 산지 한우 값은 평균 25%이상 하락했지만 쇠고기 소비자 가격이 떨어진 폭은 5%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전문연구기관 GSNI(이사장 이정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우산업에 태풍인가 미풍인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산지 한우가격(600kg,암·수소 도축수 가중 평균)은 334만9000원으로 지난해 4분기(9~12월)의 461만9000원과 견줘 26.1% 하락했다. 같은 기간 지육(도축 후 머리 등을 제거한 고깃덩어리)가격은 kg당 1만3671원에서 1만1672원으로 14.8% 떨어졌다. 반면 지난 2005년 한우고기 평균가격 기준(100) 소비자가격지수는 99.2에서 93.7로 5.5% 낮아지는데 그쳤다.

보고서는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시에도 가장 많은 이득이 유통업자들에게 돌아갔는데 수입재개시에도 같은 결과라는 의미"라며 "소비자 가격에 비해 산지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농가의 불안이 산지 시장에서 가격교섭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소비자 가격, 지육 가격 동향 정보를 산지 농가에 널리 알려 지나치게 싼 값에 판매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FTA 관련 농업예산3,800억원 사용 못하고 해넘기나

농업계가 올해 농림수산물부의 사업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묶여 사용이 제한된 예산을 조속히 풀어달라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2007년, 올해 농식품부 소관 예산 12조4,242억원 가운데 1조2,968억원을 한·미 FTA 보완 대책 예산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당시 기획예산처가 이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FTA관련 대책 예산 중 3,800억원은 '한미 FTA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될 때까지 그

집행을 유보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지금까지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위해 집행 시급** = 기획예산처의 단서조항으로 예산집행이 유보된 것은 모두 30개 사업 3,8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8개 사업(2,149억원)의 경우 국회의 한·미 FTA 비준 동의와 관계없이 농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특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광역식품산업 클러스터사업, 한식 세계화사업 등은 정부가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인 대표적인 사업이어서 예산집행이 유보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보완책 마련해야** = 정부의 FTA 보완 대책 중 집행이 유보된 예산은 수입개방 피해 방지의 사전준비 차원에서 조속한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정부도 최근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국회 등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올해 남은 사업 추진 기간이 4개월여에 불과해 집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 사업예산은 올해를 넘기면 불용예산(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예산)으로 처리되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유 소비촉진대책 마련 서둘러야"

원유기본가격이 인상될 경우 연간 35kg남짓한 1인당 시유소비량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원유기본가격은 지난 2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합의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20.5%, 120원/ℓ가 인상된다. 또 유가공업체에 따르면 원유기본가격이 인상된 것을 감안할 때 소비자가격도 15~20%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인상시기를 놓고도 저울질하고는 있지만 8월말 경에는 소비자가격을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원유기본가격 인상과 소비자가격인상은 곧 우유소비량 감축으로 이어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시유가공용 소비량이 160만5000톤이었으나, 원유기본가격이 인상된 2005년에는 154만4000톤으로 줄었다가 2006년 155만6000톤, 2007년 158만2000톤으로 점차 회복이 됐다. 1인당 시유소비량의 경우 2004년 37.0kg에서 2005년 35kg 줄어든 후 2006년 34.9kg, 2007년 35kg로 거의 정체돼 있다.

이와 관련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일시적 소비감축 후 단계적으로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며 "유업체들이 이미 연초에 소비자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원유기본가격 인상됐다고 해도 소비자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다른 낙농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격이 인상될 경우 소비감축은 불가피하다"며 "수급안정을 위한 유대지급체계 변경과 함께 생산자와 유업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낙농업계가 원유기본가격인상의 부대조건으로 합의했던 원유의 수급안정 및 품질제고, 유대산정체계 개선 등을 위해 정부와 낙농업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학교우유급식 확대 무산 위기 축산발전기금 우유지원비 예산 127억원 삭감대상에 포함

우유 소비 확대와 청소년 영양 불균형 해소에 어려움을 겪으며 무산될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업계 관계자들은 7월 초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2009년도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가운데 저소득층·차상위계층 학생에 대한 우유급식 지원 사업비 127억여원이 기획재정부의 삭감 대상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우유급식 지원 인원을 기존 저소

득층 37만4,000명에서 차상위계층 20만5,000명을 추가해 내년부터 57만9,000여명으로 확대하려던 농식품부의 사업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 같은 학교 우유급식 예산 확보 난항은 농식품부가 개방 확대에 대비한 현행 학교 우유급식제도 개선을 통한 우유급식 확대 대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농식품부는 우유급식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및 도서벽지 학생까지 확대하고 공급품목 다양화 등을 통해 2006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교 우유급식률을 2010년 58%, 2012년 60.5%에 이르도록 한다는 목표도 이루기 어려워졌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학교 우유급식률 향상 목표는 무상 우유급식 확대에 인한 기대치가 아닌 학교 우유급식이 도입됨으로써 중·고등학생들의 일반 우유급식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 2006년과 2007년 2년간 중학교 급식 현황을 보면 무상급식률이 3.6%에서 4.3%로 소폭 늘고 일반급식률도 20%에서 23.3%로 늘었다.

급식 학생 수도 2007년 무상급식이 15만5,000명으로 1년 동안 2만1,000명 증가한 데 비해 일반급식은 76만8,000명에서 92만명으로 15만2,000명이나 늘어 학교 우유급식 여부가 중고생 우유 음용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우유급식 변화는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낙농업계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학교 우유급식이 우유 소비 확대와 낙농산업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며 "담당 부처에 관계없이 사업이 이뤄지도록 예산이 짜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학교 우유급식 확대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영양 균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소비자까지 확보하게 되는 낙농산업의 안정성을 위한 것인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출처 : 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 라이브뉴스)